

축산연구회 1차 회의 2016-11-07

－ 「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」 －

창립식 및 1차 회의 결과

축산연구회 1차 회의 개요

- 일 시 : 2016. 11. 07 (월) / 17:00 ~ 18:00
- 장 소 : 아산시청 별관 1층 회의실
- 대 상 : 축산연구회 연구모임 구성원

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

1차 회의결과 종합

□ 회의참석자

- 도의원 : 강용일, 김명선, 김문규, 김복만, 이기철
- 전문위원 : 류재홍, 이완규
- 도청 : 정규재 과장, 오형수, 고일환, 이돈규
- 외부 : 백충현, 서석천, 지덕환, 홍석학, 신우식
- 충남연구원 : 이상준, 최정현

□ 인사말씀 : 김응규 의원님 주재

발제자	발제내용
강용일	■ 시의적절한 논의라고 생각한다.
김명선	■ 무허가 축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.
김문규	■ 축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최대한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.
김복만	■ 우리 지역도 이런 문제가 있다. ■ 반드시 해결이 필요하다.
이기철	■ 아산시에는 벌써 문제 제기된 축사가 발생하고 있다. 개선방안 필요하다.
류재홍	■ 연구회를 최대한 지원하겠다.
정규재	■ 우리 분야에 해당되는 것이에 무허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.
오형수	■ 기한 내 모든 농가가 적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
고일환	■ 환경문제와 양돈 문제가 걸리지만,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.
이돈규	■ 무허가 축사가 산림 내에도 있는데, 산지관리법 상 기준에 적합하면 구제가 가능하다. 이 기준에 부합되면 구제가 가능하기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.
홍석학	■ 경기도는 벌써 단체를 만들어서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. ■ 실증사례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.
지덕환	■ 악취 등 문제가 된다.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.
서석천	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축산 농가에 도움이 필요하다.
신우식	■ 현행 건축법 상 어려움이 있다. ■ 과거에도 이러한 무허가 해소 노력이 있어서 처리한 경험이 있다. ■ 그러나 현재는 법이나 지침 상 어려움이 있다. ■ 그래서, 법이나 지침을 고려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, 농식품부나 국토부 등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.
백충현	■ 법이 어렵더라도 농민이 잘 모르기에, 적극 지원 부탁한다.

□ 자료 소개 : 김응규 의원

발제자	발제내용
김응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무허가축사 실태 파악 ▪ 무허가축사 축종별 유형별 현황분석 ▪ 전문가 및 도민이 함께 하는 정책 토론회 개최 ▪ 연구모임의 결과를 무허가 축사의 불법사항을 유형별로 제시하여, 개선책을 마련하는 근거 자료를 만들고자 한다. ▪ 내년 11월까지 할 예정이다. ▪ 무허가축사는 소규모로 자본이 부족하다. 장기 저리 자금 지원이 필요한데, 이것이 어렵다.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. ▪ 실질적으로 연구모임이 환경문제(악취 등) 해결에 목적을 두고 있다.

□ 회의 및 토론

발제자	발제내용
강용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신우식 교수님 말씀대로, 양성화는 안되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다. ▪ 실질적으로는 양성화 지침을 바꿔야 한다.
신우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지침을 안 바꿔도 가능할 수 있다. ▪ 불법이 100이면 70정도라도 양성화를 할 수 있다면 좋은 것이다.
강용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말로만 양성화지, 양성화 지침은 현실에 안 맞다. ▪ 지침을 바꾸기 위해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와의 협의나 토론회를 통한 양성화를 위한 법이나 지침을 바꾸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. ▪ 연구모임이 운영되서 결과가 일정 수준 도출되면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 등과 협의를 필요하다. ▪ 기왕이면 100% 모두 양성화를 위한 지침을 바꿀 필요가 있다.
신우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축사가 다른 사람 경계를 침범하면, 행정에서 어쩔 수 없다. ▪ 이럴 경우, 경계에 걸린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.
오형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9월 26일에서야 양성화도 아닌 적법화로 부처간 협의가 되었다. ▪ 이제야 중앙에서도 태동하는 단계이다. 농식품부 주도 TF팀 구성이 이루어졌다. ▪ 9천 400여 농가가 무허가다. 이것에 대해 도에서도 2달 간 노력해서 187 농가가 적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. ▪ 경기도와 더불어 충남도 TF팀을 구성하고 있다.

발제자	발제내용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필요한 제도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.
이돈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작년 11월에 농식품부 주관 국토부 등이 기준을 만들었을 때, 산림부에서는 허가 받지 않고 건축행위를 했을 때 축사에 한해서는 7년이 지나면 복구비 면제를 하도록 하고 있다. 현재도 산림관리법 상 축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에서는 축사는 복구비 면제가 되도록 하고 있다. 물론 타법(용도 등)에 저촉받지 않으면 가능하다.
정규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농지도 축사 부속시설 관련도 농지법이 변경되서, 산림부와 같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.
고일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악취 및 오폐수 등에 대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물러날 수 없다. 다음부터는 물관리정책과장이 참여할 것이다. 물관리정책과장이 와도 환경적인 측면은 적법하게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.
김복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어려운 문제다. 잘 풀렸으면 한다. 기존 시설이 이루어지고 법이 나중에 이루어졌다. 이건 문제다. 신우식 교수 등 구성원이 잘 이루어졌다.
김명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지 경계선에서 이격거리(평균 3m, 아산 1m)가 상이하다. 면지역(2m)이나 읍지역(4m)은 진입도로에 대한 기준이 서로 상이하다. 이렇듯 상이한 기준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.
오형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이러한 기준은 시군별 조례에 따라 다르다.
신우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건축법 상 관습상 도로는 4m 이상이면 도로로 인정된다. 그래야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다. 이렇게 되면 김명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. 당진은 주거지에서 축사까지 거리는 최소 1km이다.
오형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그것은 당진시 조례에 기초한 것으로 확인하겠습니다.
김복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민과 축산농가 간 상당한 문제가 있다. 이러한 문제가 시군마다 다르다.
백충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아산시는 축종별로 조사는 했다. 건축사를 축종별로 협의하고 있다. 신우식 교수도 말한 거리도 문제지만, 남의 토지를 침범한 농가가 많은게 문제다.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렵다. 건폐율 초과 문제도 어렵다. 가장 큰 문제는 환경문제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.(분뇨처리시설 설치 혹은 분뇨처리 방법 등에 대한 계획서 제출)

발제자	발제내용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남의 토지를 임대차해서 축사 건립한 경우, 산지를 농지로 보고 농지전용 허가를 득해서 한 것(1980년대)의 경우, 허가 당시에 측량 등이 미흡했는데, 나중에 보니 옆의 토지에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문제도 있다.
서석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양돈의 경우 미생물을 활용하여 저감을 노력하고 있다. ■ 정부나 도 차원에서 보다 좋은 미생물 보급을 해 주면 좋겠다. ■ 현재 사용하는 것은 별로 소용이 없다. ■ 농가에서는 악취 저감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지만, 미생물이 많으니 개선이 필요하다.
지덕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양계는 악취가 문제다. ■ 똑부러진 결과는 없다.
강용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축산은 악취 처리 및 시설 설치가 문제다. 도나 정부에서도 시설을 하고 있고 지원금도 큰데(일부 30억도 있음) 실효가 없다. ■ 광역단위나 지자체 단위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관리시설을 최대한 지어서 축사 악취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은 어떤지? ■ 개별 농가 지원도 필요하지만,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선진국 퇴비 등을 총괄적으로 개별 농가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나? ■ 강원도인가에서는 도차원에서 공동자원화시설을 대규모로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다. ■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축산 농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지 않는지?
오형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알겠습니다. ■ 축산분뇨가 시군별로 단지와 규모화 되어 있다. ■ 미생물도 축종별로도 다르게 사용해야 한다. ■ 현재 도에서 다양한 맞춤형 악취 제거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. ■ 현재 충남도에 18개소 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 운영 중이다.
홍성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허가는 받았는데, 건물 등을 이어 붙여서 사용하는 문제, 창고로 허가 받고 축사로 활용하는 것 등에 대해, 이런 것을 적법화 하는 문제 모색이 필요하다.